

동향과 이슈 2019-0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국제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서울을 중심으로 -

이/슈/분/석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노동권익센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일본, 서울을 중심으로-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I. 서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커졌다. 은퇴 후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개인에게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사회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시장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되고 있다. 첫째는 '은퇴 전 기간을 어떻게 길게 만들 것인가'이고, 둘째는 '은퇴 후 기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최근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중고령자가 대상인 두 번째 방향이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노인의 삶을 연금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주로 맡겼던 선진 국가들도 중고령자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UN과 OECD의 국제기구들은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게 '노인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장혜경·김영란, 2003; 3~4). 은퇴한 중고령자에게 고용을 통해 인생이모자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의 완화, 노동공급 확

대, 삶의 질 개선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관련 실증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에게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자아효능감, 삶의 질, 사회적 관계, 건강과 빈곤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된 것이다(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안세아, 정은지, 2011).

하지만 아직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더 많은 발전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중고령자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66~75세에서 36.8%이고 76세 이상에서 57.1%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OECD, 2016). 반면,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2%로 매우 낮았다(OECD, 2015). 낮은 연금지출에 의해 상당히 높은 노인빈곤율이 설명되지만, 연금의 성숙과 확대를 기다리기에 빈곤을 겪는 노인에게 하루가 고통인 당장의 현실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기 전 시기 동안, 노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중고령자들에게 고용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은퇴 후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은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분석틀을 가지지 못하였다(지은정, 2013; 권용식, 2009). 이에 따라, 정책적 보완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별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달리, 분석틀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정책의 급여유형을 분석틀로 하여, 한국, 미국, 일본, 서울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급여와 대상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포함됨으로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각각과 상호 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의 구성은 각 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노인 인구, 공적연금 지출 규모, 중고령자의 빈곤율,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로 살펴본다. 그 이후에는 한국, 서울, 미국, 일본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을

고용보조 및 일자리 창출, 고용연계서비스, 노동시장훈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국가별 경제사회적 상황

한국, 미국, 일본의 은퇴 후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전, 이들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배경이해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유럽 또는 OECD 평균과 함께, 노인 인구 비율(고령화 수준), 공적연금 지출 수준, 중고령자 빈곤율,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검토된다. 다만, 서울은 한국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자료 산출의 한계로 인해 제외된다.

1. 노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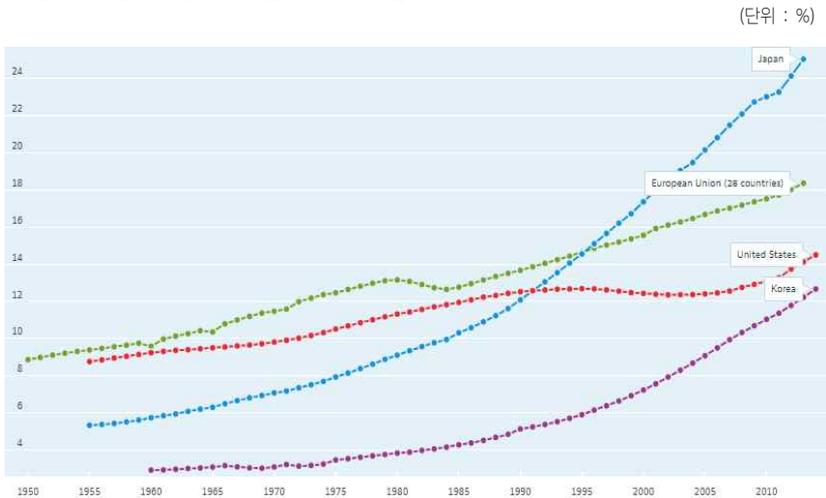
유럽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3개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수준과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고령화의 수준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독보적인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 25.1%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14.5%)과 한국(12.7%)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속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관측이 시작된 55년 이후 유럽과 비슷한 속도로 고령화 비율이 상승하다가, 1985년 이후로 매우 빠른 속도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1990년 이후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고령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속도와 수준면에서 빠르거나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1955년 관측이후 완만한 8%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비교적 최근인 2005년 이후 한국과 비슷한 속도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인구는 14%(4,450만 명)에서 2018년 16%(5,100만 명)로 상승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비율은 65%이고, 50세 이상은 35%, 65세 이상은 약 16%였다.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8).

[그림-1] 유럽, 한국, 미국, 일본의 인구고령화 추이



자료 : OECD

2. 공적연금의 지출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이 7.9%인 2011년 기준, 일본은 GDP 대비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국은 6.7%, 한국은 2.2%로 낮았다. 일본은 높은 고령화로, 연금제도의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평균보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 1995년 이후부터 OECD보다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고령자인구비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고령화 수준과 비교했을 때, 공적연금의 지출 수준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분 이외의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1>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1
한국	0.7	1.2	1.4	1.5	2.2
일본	4.8	6.1	7.3	8.5	10
미국	5.8	6	5.6	5.7	6.7
OECD	6.2	6.7	6.8	7.0	7.9

자료 :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3. 중고령자의 빈곤율

중장년 빈곤율은 한국, 일본, 미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고령 빈곤율은 한국이 일본과 한국보다 독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의 51~65세 빈곤율은 15~16%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도 기준 한국의 초기 노년(66~75세)과 후기 노년(76세 이상) 빈곤율은 각각 36.8%와 57.1%를 보였다. 일본은 16.7%와 22.9%를, 미국은 19.5%와 28.1%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76세 이상의 후기 노령자들의 빈곤율이 높았는데, 이는 공적연금 지출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령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고령자의 빈곤은 경제활동참여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공적연금 확대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 중고령자의 빈곤율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51-65	-	-	-	15.2	14.7
	66-75	-	-	-	37.5	36.8
	76+	-	-	-	54.6	57.1
일본	51-65	14.4	-	-	14.5	-
	66-75	17	-	-	16.7	-
	76+	21.3	-	-	22.9	-
미국	51-65	-	15.9	15.8	15.2	16
	66-75	-	16.7	17.4	17.6	19.5
	76+	-	26.4	26.3	25.7	28.1

자료 : OECD Database

4.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미국, 일본의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65세 이상 노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31.5%로 65세 이상인구 3명 중 1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70세 이상의 후기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보다 높는데, 65-69세는 오히려 낮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은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근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일본의 50~59세 중장년은 80% 중후반의 매우 왕성한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70% 초중반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과 전기 고령자의 고용 및 경제활동 지원, 연금가입 제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한국 후기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인한

산재 및 사망이 염려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표-3>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50-54	77.6	78.8	79.4	79.3	79.8
	55-59	70.7	72.6	72.6	72.8	74.2
	60-64	65.8	67.4	67.9	68.1	69.1
	65-69	58.8	60.0	61.2	61.6	62.5
	65+	31.2	31.8	31.1	31.3	31.5
일본	50-54	85.2	85.1	85.8	86.1	86.6
	55-59	79.5	80.6	81.0	82.0	82.7
	60-64	69.4	71.0	72.2	73.6	75.3
	65-69	61.4	62.9	64.5	65.8	68.1
	65+	20.5	21.3	22.1	22.8	23.5
미국	50-54	78.3	78.2	78.1	78.4	78.8
	55-59	72.4	71.4	71.5	71.5	71.9
	60-64	64.4	64.1	63.9	64.1	64.5
	65-69	55.0	55.8	55.4	55.8	56.5
	65+	18.7	18.6	18.9	19.3	19.3
OECD	50-54	78.8	78.8	79.2	79.4	79.9
	55-59	70.5	70.7	71.2	72.0	72.7
	60-64	47.7	49.1	49.9	51.1	52.4
	65-69	24.6	25.0	25.6	26.2	26.8
	65+	13.5	13.7	14.1	14.5	14.8

자료 : OECD Database

III. 연구방법

비교하는 사례는 한국, 미국, 일본, 서울이다.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국제비교한 지은정(2013)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은 저소득 노인 지원형으로 같은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에 속하여 국가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현상으로 노인의 빈곤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특징을 공유한다. 한편, 서울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 및 보충대책을 마련하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정부 간 상호 보완에 관련된 시사점을 찾기 위해 포함되는 것이 연구의 의미를 더 해준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의 정책대상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이다. 즉,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시점을 늘리는 정책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은퇴 이후의 대상에게 새로운 고용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본 연구의 범위이다. 본 연구는 4개 사례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노동시장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2] 연구의 분석틀



사용되는 분석틀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고용연계서비스와 행정지원, 노동시장훈련, 고용보조 및 일자리 창출(임금보조, 사회보험료감면, 창업자금지원, 직접일자리창출)로 나눈 것을 따른다(지은정·배준호·이정우·권문일·김혜란·최영준·하세윤,

2012). 고용연계서비스와 행정지원(이하 고용연계서비스)은 주로 일자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배치에 주목적이 있는 정책을 의미하고, 노동시장훈련정책은 정책 대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의미하고, 고용보조 및 일자리 창출정책은 공공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창업자금지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임금보조와 사회보험료 감면은 기존 설립되어 있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 반면, 창업자금지원은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차이가 있다.

IV.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본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1. 한국

1)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및 재능나눔, 일자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대상은 주로 만60세 이상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크게 노인 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사업단, 인력파견사업, 시니어 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공익활동형, 재능나눔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나누어보았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일자리창출(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회서비스형), 임금보조(시니어인턴십), 사회보험료지원(기업연계형), 창업자금지원(시장사

업단,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었고, 고용연계서비스는 인력파견사업과 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털이 있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서비스의 성격이 사업에 많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공공 일자리 창출 -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 공공 일자리 창출의 성격을 가진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사회서비스형 세 가지이다. 우선, 공익활동은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취약노인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 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이다. 주요 사업유형은 노인 안전예방(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활동), 상담 안내(노인상담, 학대예방, 인권지킴 활동), 학습지도, 문화예술(문화공연 활동) 등이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선발기준 배점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과 세대구성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후기 노령의 차상위 독거노인이 실제 주요 대상이다. 공익활동의 실제 참여노인의 평균 연령은 74세 정도이다. 재능나눔활동의 선발기준 배점은 공익활동과 다른데, 경력활동, 자격보유, 기초수급여부에 배점이 높아 재능능력과 기초연금미수급 계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익활동의 지원은 9~12개월 동안 월 27만원이, 재능나눔활동은 6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에 도입된 사회서비스형은 최근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시설에 노인인력을 지원 및 활용하는 일자리이

다. 참여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활동은 최소 10개월 월 60~66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월 최대 59.4만원(시간당 9천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급)이 지급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의 선발기준 배점은 공익 활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후기 노령자의 차상위 독거노인이 실제 주요 대상이다.

이 제도들이 경제활동지원사업인가 사회활동지원사업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해보이고 논쟁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민간분야에 취업되기 힘든 취약 고령자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다른 곳에 취직되어 있는 노인은 제외된다는 점,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 통계청에서 취업자로 분류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2) 임금 보조 - 시니어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상점판매원, 물류관리, 주유원, 차량관리원, 고객 상담, 홀서빙 등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에게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업지원금은 월 급여의 50%(최고 월30만 원)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채용성과금은 약정기간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 50% 지원하고,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원 지원한다.

(3) 사회보험료 지원 - 기업연계형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관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기업연계형은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250만 원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업연계형 사업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으로 나뉘어있다. 일반형은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통합형은 다시 채용형, 재고용형, 기술유지형으로 나뉜다. 채용형은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유형이다. 재고용형은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해당기업에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되어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유지형은 일시적 기술인력 채용인 필요하나,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 해당업종 관련 15년 이상 근무한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유형이다.

(4) 창업자금 지원 -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창업자금 지원 성격의 사업은 시장형사업단과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이다. 세부사업유형으로 공동창업형(공동창업장 운영사업), 제조판매업(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매장운영사업 등), 서비스제공형(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이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등)이 있다.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제외된다. 선발기준 배점을 살펴보면,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수급여부가 포함되어 경력이 있는 빈곤 독거노인이 주요 선정대상이다. 근무시간과 인건비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마다 다르다.

고령자친화기업사업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

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에 설립자금을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기업인증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모기업연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시장형사업단발전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브릿지형), 숙련된 기술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시니어직능형)으로 각각 지원규모가 다르다.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시간과 인건비는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5) 고용연계서비스 - 인력파견사업, 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민간 일자리에 노인을 배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은 노인 일자리의 인력파견사업단과 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탈이 있다. 인력파견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에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이다. 전문관리직에서부터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직까지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며,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이다. 근무시간과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에 정함에 따르며, 참여자격 충족 시 별도의 선발기준은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험감독관, 경비원, 농어촌일손도우미가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탈은 일자리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사회활동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이다. 그 중 일자리 정보는 워크넷 중 노인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용 정보를 제공해준다.

2) 고용노동부, 신중년 55+ 현역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55+ 일하기 재취업 촉진사업은 은퇴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인

재은행, 희망넷, 인생3모작 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은퇴 후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나누어보면, 일자리 창출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공공일자리 창출), 고령자고용지원금(민간임금보조)이 있었고, 고용연계서비스는 희망넷과 고령자 인재은행이, 노동시장훈련과 고용연계서비스가 패키지로 이루어진 인생3모작 패키지 시스템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하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서비스의 성격이 사업에 많이 담겨 있었다. 다만, 노동시장 훈련이 인생심층상담을 통해 고용연계서비스와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1) 공공 일자리 창출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력을 많이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이들의 능력을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매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대상자는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이고, 참여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이다. 지원내용은 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데,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시간은 월 120시간 이상(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의 제약이 있다.

(2) 임금 보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차등화된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면, 1인당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한다.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아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된다.

(3) 고용연계서비스 - 희망넷, 고령자 인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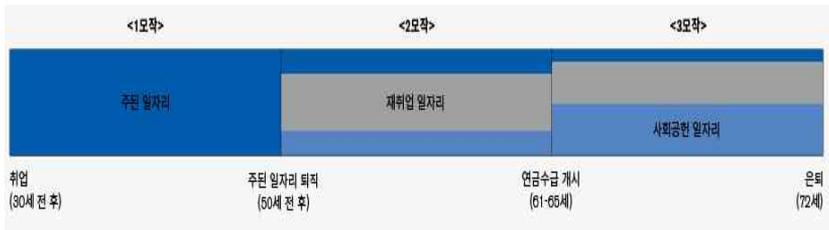
희망넷은 중장년에 특화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포털이다. 워크넷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희망넷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인재은행사업은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공공 이외의 민간비영리 고용서비스지원 기관을 관리하여, 양질의 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이고, 지원내용은 (재)취업 상담 및 알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년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등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4) 노동시장 훈련 및 고용연계서비스 - 인생3모작 패키지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에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는 인생3모작 패키지 시스템 안에서 생애경력설계, 주요 경력별 준비 지원, 취업·창업 실행지원, 사후관리를 구축하고 있다.

인생3모작 패키지 시스템은 40대 이상의 집단이 주된 일자리에 은퇴하기 전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을 지원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복지제도 안에서 은퇴 후 삶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임은경, 2018).

[그림-3] 인생3모작 개념도



자료 : 임은경(2018)

인생3모작 패키지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동시장 훈련, 고용연계, 사후관리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의 성격은 1단계와 2단계이다. 1단계는 대상자의 고용상황(재직자, 구직자)에 맞게 제공되며, 재직자 프로그램은 연령(40대, 50대, 60대)에 따라 더 세밀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40대에게는 조직 내 성과를 기반으로 개인의 경력 관리, 50대에게는 현직 유지 및 인생 2모작의 재취업 설계, 60대에게는 퇴직 이후의 삶 준비 및 인생 3모작 설계를 지원해준다. 2단계는 전직준비형, 기관연계형, 적합직무발굴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직 준비형의 전직스쿨프로그램은 만4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확보하여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재도약프로그램은 퇴직이후 경력목표에 따라 재취업창업귀농귀촌은퇴설계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을 통해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인생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총 20시간 동안의 집체교육형식으로 진행되며, 재도약 프로그램 수료 후 전직에 필요한 개별 컨설팅과 취업동아리 연계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기관연계형은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 베이비부머 과정 등의 훈련과정,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그림-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구성



자료 : 임은경(2018)

2. 서울

서울시의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은 주로 서울시50+재단과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울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보람일자리사업(공공일자리 창출이), 고용연계서비스로 서울시일자리포탈, 인재뱅크, 서울시어르신취업정보·알선이, 노동시장훈련으로 앙코르일자리, 50+창업교육,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노동시장훈련은 빈약했다.

(1) 공공일자리 창출 - 보람일자리사업

서울시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 50~67세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 소지가 서울시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일자리이다. 수행기관은 서울시50+재단과 서울시담당과 등이다. 즉, 중년에게 공공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2019년 현재 활동영역은 사회서비스(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성인발달장애맞춤활동도우미, 장애인시설지원단 등) 마을(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50+에너지컨설팅트사업단 등) 세대통합(50+학교안전관리지원단, 50+학교안전교육단, 50+도시농부텃밭지원단 등)이다. 활동조건은 월 57시간 이내이며, 참여자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 등이 제공된다.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고, 활동비는 525,020원(57시간×9,211원)이고, 교육실비로 참여자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사업규모는 1,575개이다.

(2) 고용연계서비스 - 서울시일자리포탈, 인재뱅크, 서울시어르신취업정보 및 알선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구인업체 및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포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사와 1:1 맞춤형 심층상담 및 취업 알선을 하고 있으며, 장년 만55세 이상에게 매월 취업준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정보는 각 자치구청 및 서울50+포털 등에 연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0+재단은 인재뱅크라는 사업 명칭으로, 노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데이터화하여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일자리를 위한 50세~64세의 인재의 DB와 일자리 수요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매치 메이커를 통해 매칭을

시켜주는 지원 체계이다. 이 사업은 단순 정보 제공과 달리, 영역별·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50+인재풀을 구성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취업알선, 취업정보, 취업훈련을 제공한다. 60세 이상에게는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을, 50세 이상에게는 구직알선 및 훈련활동을 지원한다. 취업알선은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취업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구직상담, 구직 알선, 훈련 연계, 취업자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업정보는 자체 구인정보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

(3) 노동시장훈련 - 양코르일자리, 50+창업교육,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

서울시50+재단은 은퇴 이후 대상자들에게 개인적 의미와 성취,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 지속적 수입을 만족시켜주며, 일과 참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력과 교육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코르일자리는 새로운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육과 초기 단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려는 50~64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50+창업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유형으로, 사회적가치공유형 창업, 기술형 창업, 소상공형 창업, 1인 및 여성창업이 나뉘어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과 함께,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취업교육은 취업설계, 창의직업아카데미(소품공예, 문화재해설사), 사회공헌아카데미(들꽃가드닝, 도시정원수경재배교육, 방과후교실 강사교육), 취업준비교육(이력서 작성 및 면접성공법, 기초노무교육), 직종교육(경비주차교육, 배달원교육, 환경관리원교육, 산모도우미교육, 주유원 교육) 등을 진행한다.

3. 미국

(1) 고령자 훈련 및 고용연계서비스 - SCSEP

미국의 고용정책의 원칙은 포괄적인 사회적 개입보다 개인의 책임과 자활에 두고 있으며, 이를 잔여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주에 대한 노동수요를 늘리는 지원보다 직업훈련, 직업알선, 근로연계복지 등 노동 공급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노인실업률의 증가와 빈곤율의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연방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정책을 전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령자 고용지원대책은 연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ocial Employment Program)'이 있다. SCSEP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가 담당하여 고용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의 목표는 크게 2개로, 참여자에게 고용훈련과 직업배치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높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급 훈련 그 자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실질상태인 저소득층(빈곤선 125% 이하 소득 미만의 만 55세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소득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65세 이상은 우선 선발된다. 활동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연간 1,300시간, 주당 평균 18~22시간이다. 일일 최대 6시간까지 가능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 참여자의 신분은 피용인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고용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4. 일본

(1) 공공 일자리 창출 - 시니어워크

일본은 고령자들이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임시적이고 단기적이며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이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취업기회와 사회활동 참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지하였다.

실버인재센터는 이와 같은 노인들의 요구를 알선해주는 조직인데,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 조직은 '자주, 자립, 공조'의 이념하에 일반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령자가 그 경험과 능력을 계속 살리고 일함으로써 사회공헌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취업이 아닌,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센터는 등록된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주변에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 양육, 개호,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의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즉, 유급 봉사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배준호, 2012). 실버인재센터의 대상은 빈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분야에 취업되기 힘든 취약 고령자와 저소득 노인들이 참여한다. 대부분 지역사회의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있고, 높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일자리이다. 보수는 한 달에 10일 일하고 4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2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표 4> 한국, 미국, 일본, 서울의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정책유형	미국	일본	한국	서울
인 자 리 창 출		<p>*시니어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저소득 노인 	<p>*공익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력개발원 -차상위 65세이상 독거노인 (실제 수혜연령은 후기 노인) <p>*사회서비스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력개발원 -차상위 65세이상 독거노인 <p>*재능나눔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력개발원 -재능있는 고소득 65세이상 노인 <p>*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전문경력있는 50세이상 퇴직자 	<p>*보람일자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50+재단 -소득에 관계없이 50~67세 서울 거주자

정책유형	미국	일본	한국	서울
임금 보조			<p>*시니어인턴십 -노인인력개발원 -60세이상 고용</p> <p>*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60세이상 고용</p>	
사회 보험료 지원			<p>*기업연계형 -노인인력개발원 -60세이상 고용</p> <p>*시장사업단 -노인인력개발원 -60세 이상 경력있는 비근로거노인</p>	
창업 자금 지원			<p>*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인력개발원 -60세이상 고용</p>	

2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본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정책유형	미국	일본	한국	서울	
고용연계 서비스	<p>*SCSEP -노동부 -저소득 55세 이상 (65세 이상 우선)</p>		<p>*인력파견사업 -노인인력개발원 -60세이상 시업특성적합자</p> <p>*100세누리시니어사회활동포탈 -노인인력개발원 *희망넷,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노동부</p>	<p>*일자리포탈 -서울일자리플러스 센터</p> <p>*인재뱅크 -서울50+재단 -50~64세</p>	<p>*어르신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서울어르신취업훈련센터 -50세 이상</p>
			<p>*인생3모작 패키지 -고용노동부 -40대 이상</p>	<p>*양코트일자리 -서울50+재단 -50~64세</p> <p>*50+창업교육 -서울50+재단 -50~64세</p>	<p>*어르신취업훈련 -서울어르신취업훈련센터 -50세 이상</p>
노동시장 훈련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 서울, 미국, 일본의 은퇴 후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노동시장정책의 유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훈련, 고용연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당 사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한국과 서울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과 서울은 미국과 일본보다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에서 일자리창출, 고용연계서비스, 노동시장훈련 모든 유형의 정책이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다양한 종류의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명확하고 단명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이 없는 민간 일자리로 자립을 지향하면서 고용서비스와 노동시장훈련이 연계된 SCSEP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일본은 민간분야에 취업되기 힘든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일 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워크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과 서울은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노인빈곤율, 낮은 연금지출, 중고령자들의 조기퇴직이 사회문제로 더 크게 주목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높은 경제참여의지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은퇴 후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정책이 활발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빈약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중과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행정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빈약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은정(2016)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가가 저조하고 한계성을 지닌 것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은 경제활동을 위한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참여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고용연계, 직업교육이 균형있게 발전

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상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인생3모작 패키지 지원이 개인의 인생 계획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설계지원에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지점이다. 중고령자들을 위한 훈련이 획일적 방향보다 개인의 인생경험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접근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 차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삶의 유형에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으로 개인을 보기보다 개개인의 삶을 별도의 사례로 살펴보는 섬세한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정책 중복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사하고 명확히 성격이 구별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고용 연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공익활동사업과 보람 일자리사업 그리고 각 주체마다 운영하는 일자리정보포탈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 활발한 프로그램 진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역할이 명확한 행정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서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자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서울시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진일보한 면과 함께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어 중앙정부보다 보편성이 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50~67세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즉,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50~67세를 대상으로 하여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빈곤층 외의 계층까지 제도상 포괄하여 오히려 빈곤 완화보다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중고령자 지원정책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이 누락되

어 있으며,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고용연계서비스가 분리·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행정 인프라 및 역할 형성과 재정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연계서비스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진행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서울시의 어르신취업지원사업은 미국의 SCSEP과 고용노동부의 인생3모작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직업교육과 연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본다.

참고문헌

- 강소량·정혜윤·송창용·최일선·유선차·임승연. 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권용식. 2009.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6 : 383-407.
- 배준호. 2012. “일본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및 사회보장정책.” 지은정·배준호·이정우·권문일·김혜란·최영준·하세윤. 2012.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안세아, 정은지. 201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은경. 2018. “신중년의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서울시50+재단 50+리포트.
- 장혜경·김영란. 2003.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지은정. 2016. “저소득 고령자의 고용지원은 고용성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미국의 SCSEP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정부학연구』 22(1) : 189-225.
- 지은정. 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사회복지연구』 44(3) : 177-206.
- 지은정·배준호·이정우·권문일·김혜란·최영준·하세윤. 2012.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OECD. 2015. “한 눈에 보는 연금 2015.” OECD.
- OECD. 2016. OECD Database
- U.S. Census Bureau. 2018. Current Population Survey



동향과 이슈 2019-01

발행일 2019. 8. 발행인 문종찬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03191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태일기념관 5층 Tel 02-6925-4349 Fax 070-8250-4349 www.labors.or.kr